

미래전략연구원 특별기고

실용주의 대일외교: 구동존이(求同存異)인가, 동상이몽(同床異夢)인가

전진호 (미래연 연구위원/광운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편집자 주: 이 글은 미래연이 신정부 출범을 맞아 기획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등 총 5개 <주요 국가(지역)와의 외교관계 방향> 시리즈의 첫번째 글입니다.

지난 수년간 독도 문제, 일본총리의 야스쿠니(靖国) 참배 문제, 교과서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냉각되었으나, 이명박 차기대통령 당선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자격으로 최근 방한한 일본 국회의원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과거에 얽매이면 오늘이 불행해지며,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며, “새롭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위해 일본에 사과, 반성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신정부의 실용주의 대일외교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도 아시아 외교를 강조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차기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한일 양국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제반 현안문제에 대한 긴밀한 의견교환은 양국관계 발전에 매우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 5년 간, 역사인식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냉각된 한일관계의 개선에 차기 정부가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신정부 출범을 돌아보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이라는 동어반복(同語反復)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가깝게는 노무현 대통령도 정권 초기에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대통령 취임식에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참석하는 등 우호적으로 한일관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5년 초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제정하면서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그 이후의 야스쿠니 참배 문제, 교과서 및 위안부 문제 등의 역사 문제로 한국정부의 대일노선이 점차 강경일변도로 변화해 간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이라는 언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채 대일정책의 기본 틀로 자리 잡아 왔으며, 차기 대통령의 대일노선의 천명 역

시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결여된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라는 추상적인 언설보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 대북한 포위망 강화, 납치 및 미사일문제 해결, 한일 FTA 교섭의 재개 등 구체적인 사안의 진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주요 신문의 사설 등을 보더라도 일본의 한국 신정부에 대한 기대는 햇볕정책의 재검토에 의한 대북정책 변화나 한일 FTA 협상재개 등의 경제협력 강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일보된 입장표명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지난 수년간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한국 지도자의 역사인식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며, 일본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한국인이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과연 진정으로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의 40여 년을 돌아보면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의 관계악화는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아니라, 뜻이 같은 것을 추구하되 서로 다른 것은 존중한다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한일 양국과 양국 지도자의 향후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설로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양국은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인가? 먼저, 한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 즉 한일 양국의 공동의 미래를 그려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990년대 이래 한일 양국이 대립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담론의 부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냉전적 이데올로기 대립이 소멸된 후 양국 간에는 국가이익이 전면에 등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화, 지역화 시대에 양국은 냉전적, 국가적, 민족적 대립을 지속해 온 것이다. 따라서 냉전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수 있는 한일의 새로운 미래담론의 개발은 매우 시급하며, 이와 동시에 동아시아 공동체, 경제협력, 안보대화 등 다차원의 공동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공동의 집’을 채울 구체적인 협력 사안을 발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실용적인 한일관계’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한미일 공조의 회복이다. 역사적으로 한일관계는 한미관계 및 미일관계에 큰 영향을 받아 왔으며, 노무현 정부시절 한미관계의 악화가 한일관계의 냉각에 미친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은 한미일 협력을 통한 북한문제 해결이라는 전략적 협력의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은 일본의 안전보장 상의 가장 중대한 문제이며, 한일 FTA 체결 등 긴밀한 경제협력을 한국 신정부에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 특사를 접견한 후쿠다 총리의 발언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신정부 탄생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은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한 포괄적이고 낙관적인 기대보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라는 구체적인 정책전환에의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일본이 말하는 6자 회담에서의 한미일 연대강화는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한국의 엇박자를 경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한국 역시 한일관계 개선보다 한미관계 복원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부상해 있으며, 따라서 협력

적인 한미일 관계 안에서 한일관계를 풀어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역사문제는 일본 자신의 판단에 맡긴다”, “역사문제는 한일의 전문가가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면 될 것”이라는 차기 대통령의 희망이 진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어느 정도 일본이 이에 호응할 것인지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 작년 미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될 때에도 일본은 결의안 저지를 위한 외교 총력전을 벌였으며, 1990년대 이래 일본정부 및 정치지도자의 역사인식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일본의 역사인식의 변화와 자성을 촉구하는 노력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해야 할 중요한 대일 정책 과제임에 틀림없다. 한일 간의 역사 및 과거사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양국 간의 역사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한일 화해와 공생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문제와 현안문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응한 노무현 정부의 대일 압박은 득보다 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역사문제와 기타 현안문제의 분리접근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역사문제에는 역사문제의 논리와 방법으로, 기타의 현안문제는 각각의 현안에 걸 맞는 수단과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내용 문의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704 우)100-813 / 전화 (02)779-0711 / 팩스 (02)779-0718 / 메일 kifs@kifs.org